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배경

Online Series

2022. 04. 06. | CO 22-09

홍민 (북한연구실장)

북한의 최근 대남 비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3월 대남선전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이 증가했고 특히 대선 이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2, 4일 각각 차례씩, 군을 대표하는 박정천 당 중앙위 비서가 2일 한 차례에 걸쳐 대남 공세에 가세했다. 이번 김여정 부부장과 박정천 비서의 담화는 표면적으로 지난 1일 서욱 국방장관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위,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선제타격론'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담화다. 올해 들어 증가해 온 대남 비난을 포함 김여정 부부장의 재등장, 선제타격론에 대한 민감 반응, 핵보유국 강조 등은 향후 북한이 취할 대남 전략 및 전술적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텍스트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번 담화에 대한 내용분석, 최근 북한의 대남 비난 추이, 선제타격론 문제제기의 의도와 배경, 향후 예상되는 대남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김여정의 재등장, 대남 전술적 변화 가능성 주목

우선 김여정 부부장과 박정천 비서의 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정천 비서의 담화는 2019년 12월 14일 이후 841일 만이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해 9월 24일 이후 209일 만이다. 기존 패턴으로 본다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등장할 때마다 북한의 전술적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났다.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7월 대미협상에 대한 장문의 입장을 밝힌 7.10 김여정 담화, 2021년 6월 짧은 대미 담화와 8~9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및 ‘도발’ 발언 문제제기 등 김 부부장이 나섰을 때 대남·대미 관련 전술적 변화가 나타났다. 남북 합의 파기 위협, 북미협상 문턱 높이기, ‘이중기준’의 부당함 제기, 자위권적 무기개발론 등이다. 담화 이후 북한은 당 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을 통해 대북적대시 정책 우선 폐기론, 대결적 주적론 폐기, 전략무기 우선 개발론 등을 정책 기조화한 바 있다. 결국 공세적인 전술적 변화의 길목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일종의 거칠게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공개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신문 6면에 해당하는 남북관계 및 대남 관련 지면을 하단의 국제면과 통폐합해 사실상 축소·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까지 노동신문에서 대남 관련 기사나 논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까지 대남 비난은 주로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담화는 노동신문 4면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도 공개했다. 남측의 적대적 태도, 핵보유국으로서 대남 우위, 지도부의 대남 공세 의지 등을 드러내 4월 주요 기념일 일정에 맞춘 결속 효과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남 전술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정권 이양기,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게 남북관계의 언어적 민감성을 돌출시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자체만으로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기조가 정해졌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저변에는 남북관계를 언제든 북한 의도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전술적 우위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행은 북한 특유의 전술적 태도로 볼 수 있다. 특정 시기 정세 전환이나 기선 제압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의 쏟아내는 방식이다. 올해 연초부터 11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 대남 비난 공세, 특정 행동이나 발언 문제 삼기 등 동시다발적 행동으로 분위기를 급랭시키고 위기를 끌어올리는 행태다. 위기를 끌어올린 후 관계를 개선하고 반전시키는 것은 남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 향후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전술이다. 남북관계를 언제든 ‘주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술적 자신감 표출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때마다 나타나는 일종의 경향이다.

선제타격론 제기는 한미의 북핵공조와 작게 수립 및 정밀타격능력에 대한 우려

셋째, ‘선제타격’론을 제기한 배경이다. 올해 1~3월 북한 대외선전매체의 대남 비난 기사

는 지난해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선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여러 비난 소재 중 비중있게 다룬 것은 한국 정치권 내에서 대두됐던 ‘선제타격’론이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민감해 하는 주제다. 올해 들어 북한의 대남 비난 내용 중 선제타격 관련해서 단연 한미의 새로운 작계 수립 관련 내용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한미 국방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새 작계 작성에 필요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시(SPD)’를 만들고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이를 반영한 작계를 계획·수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0년 만들어진 ‘작계5015’가 10년이 지났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반영한 새로운 작계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은 새로운 작계 수립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 왔다. 여기에 대선 과정에서 다시 불거져 나왔던 길체인과 확장억제력 강화, 한미연합훈련 강화 등에 대해 북한은 공세적으로 반응해 왔다. 북한은 이런 움직임을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노골화하여 핵보유국 위상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반응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공개도 담화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30일 요약본 형태로 공개된 미국의 다섯 번째 NPR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과 취임 초 무게를 두었던 ‘핵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즉 핵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바꿔 미국, 동맹국, 협력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목적 아래 “미국은 동맹국 및 협력국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¹⁾ 2018년 나온 트럼프 행정부 때의 NPR에 적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극단적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적대국의 핵공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핵 단일 목적 사용’을 지지했던 기조와는 다른 것이다.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비핵 위협 또는 재래식 전쟁에서 핵전쟁으로의 비화 등 모든 상황에 대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요 동맹국을 포함, 미국의 핵억제력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단일 목적 사용’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가 후퇴함에 따라 기존처럼 핵전쟁이 아니라도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저장도 핵탄두에

1) U.S. Department of Defense, “Fact Sheet: 2022 Nuclear Posture Review and Missile Defense Review,” March 29, 2022, <<https://media.defense.gov/2022/Mar/29/2002965339/-1/-1/1/FACT-SHEET-2022-NUCLEAR-POSTURE-REVIEW-AND-MISSILE-DEFENSE-REVIEW.PDF>> (Accessed April 6, 2022).

의한 선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NPR은 미국 행정부가 보통 8년 주기로 미국 핵정책을 검토·수립하는 것으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이번까지 총 다섯 차례 검토를 단행했다. NPR은 향후 미국 핵정책과 전략 수립, 목표 능력과 전력 태세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2002년 부시 행정부는 NPR을 통해 유사시 핵무기 사용 대상국으로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 국가를 지정한 바 있다. 2018년 트럼프 NPR에선 ‘저강도 핵무기 역량 강화’와 함께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사를 담은 바 있다.²⁾ 북한, 이란 등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저강도 핵무기 역량’은 핵무기의 강도를 약하게 하되 정밀한 타격능력을 통해 목표한 지점만을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의 실용도와 윤리적 제한을 일정하게 피해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북한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2019년부터 공개하고 있는 단거리급 미사일이나 최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모두 향후 저강도 핵탄두 탑재용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전술핵무기의 다종화를 전략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런 무기 개발 행보는 미국의 핵정책 및 동북아 군비경쟁에 조용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저강도 핵무기를 통한 핵공격 위협은 동북아에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중대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2022년 NPR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직접적 반응이 나오긴 어렵겠지만, 미국의 핵정책을 대북적대시정책 중 하나로 언급해 온 북한의 기존 태도로 봤을 때, 한국을 빌미로 이번에 간접적 반응을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북한이 김영정 담화를 통해 ‘선제타격’론을 제기한 배경에는 한미의 작계 수립 움직임, 한미연합훈련 강화 제기,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미국의 NPR 등이 중첩되면서 북한의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새 정부 기선제압용이나 명분용 이상으로 실질적 위협 역시 담화의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의 ‘선제타격’에 대한 북한의 근원적 두려움이다. 작계 수립을 통한 한미의 북핵 대응이 정밀타격 강화든 미국의 저강도 핵무기 역량 강화든, 최근 북한의 ‘선제타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의 핵시설 및 핵능력이

2)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February 2018,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86/-1/-1/1/2018-NUCLEAR-POSTURE-REVIEW-FINAL-REPORT.PDF>> (Accessed April 6, 2022).

정밀한 선제타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북한은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에 대한 대남 공세적 전술 예고

넷째, 김여정 부부장이 두 번째 담화에서 언급한 ‘주적론’의 제기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9~10월부터 전통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 대결적 ‘주적론’을 부정하고 한국이 주적이 아니며 전쟁이 주적이며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북한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입장 표명은 다목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단 북한이 추진 중인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질 여러 전략무기 실험에 대한 한미 및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한 대응논리 차원이다. 일반 국가가 행하는 합법적인 자위권적 차원의 무기개발이란 논리를 구사하기 위한 장치다. 북한의 무기개발이 특정 주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막기 위한 일반적 안보 차원의 개발이란 논리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대미 최소억제력 확보의 어려움,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중장기 전력증강에 대한 초조함을 핵보유국이라는 자기 위상 규정을 통해 위협적으로 한국에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미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의 정교화는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효용성을 반감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번 ‘선제타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 정부의 장관을 표적화했다는 점에서 당장은 새로 출범할 정부에 대한 직접 공세를 피하고 수위를 조절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향후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향후 북한은 공세적 대남 태도 및 무력시위, 그리고 남한의 반발을 명분 삼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공세적인 전술을 펼칠 공산이 크다.

4월 무력 과시 일정을 위한 사전 정지 및 명분용 가능성

다섯째, 이번 담화가 북한의 4월 일정에 대한 사전 정지 또는 예비적 경고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등의 기념일에 맞춰 준비하고 있을 열병식, 무력시위, 무기실험, 대남·대미 메시지의 파급력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 명분용 담화의 성격이다. 화성-17형 조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훼손된 위신, 강화된 한미연합훈련 실시 가능성, 한미의 북핵공조 등에 대응하여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위세 과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하기로 했던 ‘군정찰위성’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이 4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고체형 우주 발사체 실험 성공, 6월 누리호 발사, 한국의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미 비난의 자제, 선 핵무기 고도화 행보 속 대미 협상의 여지 남겨두기

마지막으로 대남 비난의 급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미 비난의 부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미 비난은 2020년부터 꾸준히 미미하다. 이 기이한 대비를 어떻게 봐야 할까.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부여하는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해부터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리하는 각종 발간물에서 북한은 대외 성과 중 가장 많은 지면을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에 할애하고 있다. 대미 직접 비난에 신중한 배경에는 일단 선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단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의도로도 읽을 수 있다.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은 2025년까지 완수 일정이다. 미국의 차기 정부 역시 이때 출범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을 통해 우선 강해지겠다며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완수를 강조했다. 남은 4년여 기간 다중화된 핵무기 개발을 통해 좀 더 강해진 이후 북미협상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무기 개발 명분을 대남 공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일정한 긴장성 부여를 통해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새로운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기술적 태도를 다중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위 이중화된 목표에 대한 이해다. 북한은 향후 공세적 전략무기 개발 이후 일정한 완성 시점에서 정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종용당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제한적인 핵군축 차원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다. 이 최상위 목표 아래로 최대한 한국 정부의 전력 증강과 강경한 태도를 자극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활용하는 행동 목표,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는 미국의 곤란함을 자극하여 협상 문턱을 낮추도록 하는 목표,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국내 통치의 성과를 과시하는 목표 등이 하위 목표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하위 목표를 운용하기 위한 대응 및 공세적 논리가 ‘이중기준’, ‘선제타격 위협론’, ‘주적 부정’,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론’, ‘자위권적 행동’ 등이다. 향후 대북정책은 이런 북한의 목표에 대응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길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 대해 러시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러 고위급 인사의 접촉 보도를 통해 현 국제정세에 대한 협력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힌 부분은 의례적 차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러시아와의 공동전선에 대한 직간접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의 직간접적인 공조전선도 동시에적으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에 상관없이, 러시아의 국제적 위신 추락과 상관없이 북한은 러시아-중국과의 공동전선을 통해 자신의 무기개발에 필요한 시간벌기 및 기술적 협력, 그리고 북미협상이 최종적으로 불발될 때를 대비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정권 이양기, 새 정부 출범 초기 예상되는 북한의 행보에 대한 대응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KINU 2022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